

퇴직금, 연금 수령시 소득세 30% 절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받아

지난 7월 지정업자, 공무원 등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했다.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한 연간 1800만원이다.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

는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한다.

세액공제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절세효과가 있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부한 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

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고율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

세(5.5%~3.3%)가 부과된다.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가 절감된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0%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뉴스



하림 푸드트럭 운영

파주 북소리 북페스티벌에서, 16일~17일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열리는 '파주 북소리 2017 북페스티벌'에서 '하림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림은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 주말, 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북페스티벌을 찾는 가족이나 연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하림 '춘천식 순살 닭갈비'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시식회를 계획했다.

하림 '춘천식 순살 닭갈비'는 뼈를 발라낸 국내산 닭고기에 특제 양념이 고루 배어 있어 가정이나 야외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하림의 대표 간편식 제품이다. '순한 맛'과 '매운맛'으로 나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하림은 16일과 17일 이틀간 하루 두 차례, 오전과 오후에 각각 100인 분씩 선착순으로 시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시식회와 더불어 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인 SNS채널에 하림 푸드트럭 현장 사진과 함께 #하림, #하림푸드트럭 같은 해시태그를 올리면 메일 선착순 20명에게 하림 선물 세트, 하림플 쿠폰 등 다채로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하림 푸드트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하림 자연실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turalhari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부, 저소득층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이행

'사회적 논의기구' 행정부 내 설치키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선택약정할인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15명 내외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행정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비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편향이 있어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주시기 바란다"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

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경찰청장, 정부수석, 기재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에 발 맞춰 관련 대책방안 및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등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에서 사내를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1일 단말기요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

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 추진한다.

또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설치하며,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100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

전북은행, 'JB카드 한가위 페스티벌' 행사 개최

전북은행이 역대 최장 10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 및 여행을 가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고객들의 다양한 추석 계획에 맞춰 혜택을 제공하는 'JB카드 한가위 페스티벌' 행사를 오는 15일부터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를 통해 JB개인카드 고객들은 중소형마트, 온라인쇼핑, 전통시장, 건강식품, 이·미용, 숙박, 주유, 대중교통 업종의 가맹점에서 건당 7만원 이상 이용 시 고객별 최대 5만원까지 모바일 쿠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유래 없는 긴 연휴에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JB카드 여행 인증 캐시백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는 여행·관광사 이용시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사이다.

아울러 여행 중에도 JB카드를 지참할 경우 해외 가맹점과 면세점 이용액의 10% 캐시백을 2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전국 모든 매장에서 주요 선물 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개인 및 기업 카드 회원은 대상으로 실시된다.

/뉴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